

1.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가 아닌 것은?

- ① 허위사실기재에 의한 공무원임용취소
-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
- ③ 불법영업 때문에 영업허가취소
- ④ 중요한 공익상 필요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취소
- ⑤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취소

2.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다.
-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,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다.
- ③ 공법상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하다.
-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.
- ⑤ 공법상 계약관계지속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에 계약해지권이 존재한다.

3.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지도는 조직법상 소관사무범위내에서 가능하다.
-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.
-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·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본질적으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.
- ④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·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.
- ⑤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
4.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ㄱ.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 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ㄴ.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포함된다.

ㄷ.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ㄹ.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.

ㅁ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에 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ㄴ, ㅁ
- ④ ㄷ, ㄹ
- ⑤ ㄹ, ㅁ

5. 다음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토지·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대집행의 대상이다.
-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발송한 제2차, 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.
-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은 적법하다.
- ④ 타자집행을 행하는 제3자는 공무수탁사인으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- ⑤ 부작위를 규정한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다.

6. 다음 중 판단여지의 구속적 가치평가의 영역이 아닌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결정
-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도서결정
- ③ 공무원인사를 위한 인력수급계획결정
- ④ 보호대상문화재의 대상여부평가
- ⑤ 인사평가위원회의 인사평가

7.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위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

- 는 급부행정의 영역보다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.
-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,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.
- ③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상위법령의 시행의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효된다.
- ⑤ 법률이 주민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.

8. 다음 중 허가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나 출원없는 허가나 수정허가가 가능한 반면,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 출원없는 인가나 수정인 가가 불가하다.
- ㄴ. 허가는 강제집행 등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가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 대상이다.
- ㄷ.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되지만,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이 된다.
- ㄹ. 허가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지만 인가는 공·사법적 효과를 발생한다.
- ㅁ. 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며 인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다.

- ① ㄱ, ㄴ, ㄷ
 ② ㄱ, ㄷ, ㄹ
 ③ ㄴ, ㄷ, ㄹ
 ④ ㄴ, ㄹ, ㅁ
 ⑤ ㄷ, ㄹ, ㅁ

9.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.
-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,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 발생한다.
- ③ 교부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.
-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.
- ⑤ 신속을 요하는 경우,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.

10. 판례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은?

- ㄱ.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
 ㄴ.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
 ㄷ.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 통보
 ㄹ.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
 ㅁ.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

- ① ㄱ, ㄷ, ㄹ
 ② ㄱ, ㄴ, ㅁ
 ③ ㄴ, ㄷ, ㄹ
 ④ ㄴ, ㄹ, ㅁ
 ⑤ ㄷ, ㄹ, ㅁ

11.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담부 행정행위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.
- ②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.
- ③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은 적법한 부관이다.
- ④ 기한에 있어서 시기부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실발생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, 종기부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실 발생시 그 효력이 소멸한다.
- ⑤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목적

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.

12.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.
- ②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는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.
- ③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.
- ④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.
- ⑤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,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

13.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③ 질서위반행위시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.

14.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 아닌 것은?

- ① 대집행
- ② 직접강제
- ③ 강제징수
- ④ 즉시강제
- ⑤ 이행강제금

15. 다음 중 가구제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.
- ② 집행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.
- ③ 집행정지결정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.
- 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.

16. 다음 중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?

- ①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주변 숙박업자
- ②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량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주민
- ③ 종전에 이용하던 사도의 폐지허가처분에 대해 다른 도로의 이용이 가능해진 주민
- ④ 물품수입허가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제조판매업자
- 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

17.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.
- ②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, 사유가 소멸한 날로 14일 이내 제기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④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 알린 기간내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제기로 본다.

- 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기간은 무효등확인 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적용한다.

18.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거부처분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.
- ④ 행정청은 청문의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는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다.

19. 다음 취소소송의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제9조(재판관할)
- ② 제13조(피고적격)
- ③ 제19조(취소소송의 대상)
- ④ 제20조(제소기간)
- ⑤ 제23조(집행정지)

20. 다음 중 생활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.
- ②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.
- ③ 생활보상은 새로운 생활기반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보상으로 원상회복적 성격을 띤다.
-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, 급수시설,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.